

‘전북형 기업지원 3대 핵심전략’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형 기업지원 3대 핵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위기 조기 감지, 현장 애로 해결, 중견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7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3대 핵심 전략’을 설명하며,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기업의 동반자로서 현장에서 함께 뛰는 전북형 기업지원 모델을 정착시켜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중추기업 전담제’ 도입 △‘중견기업 육성정책’ 실행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 등 3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추기업 전담제 도입… 도지사 직보 체계로 위기 선제 대응

전북도는 먼저 대기업, 중견기업, 중점관리기업 등 지역의 핵심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중추기업 전담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북도청 과장급 공무원과 기업지원 부서 팀장, 출연기관 본

중추기업 전담제 · 중견기업 육성 ·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 등이 핵심 축 위기 조기 감지 · 현장 애로 해결 · 기업 성장 지원까지 입체적 지원체계 구축

부장 등 약 70명을 중추기업 전담인력으로 지정해, 각 기업에 1:1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전담인력은 기업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자금·노사·판로·수출입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밀착형 관리체계가 핵심이다.

또한 기업의 매출 감소, 고용 축소, 노사 갈등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내용을 즉시 도지사에게 직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긴급관리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중견기업 성장지원 본격화… 워크숍·멘토링·조례 제정 추진

두 번째 전략은 ‘중견기업 밀착 육성’이다. 전북 내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에 불과하지만, 도내 전체 매출의 14.4%, 고용의 12.8%, 수출의 18.2%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경제주체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북의 중견기업 수는 92개사로, 전국 중견기업 수



7일 오전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전북형 기업지원 3대 핵심 전략 추진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5,868개)의 1.0%에 그치고 있어, 육성과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중견기업을 중추기업 전담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전담 공무원의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성장 전략 공유 워크숍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확대, 기술개발 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 원킬 솔루션·현장 대응력 강화



5월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청사앞에서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전면 철회하라”

전북지역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대책위 출범 “국가 에너지 정책 바로잡고 균형발전 실현하는 길”

대선 앞두고 ‘전력망 새판짜기 6대 정책’도 제안 전력 소비 분산화 · 독립 규제기관 설립 등 담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전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농 전북도연맹, 완주·정읍·무주·부안·진안·장수·고창·임실 등 각 지역 대책위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동백 최고압 송전철폐 반대대책위 공동대표와 조경희 전농도연맹 부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는 초고압 송전선로는 무효”라며, “이는 지역 공동체를 무시한 폭력적 개발이며, 전북도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한전에게 추진하고 있

는 제9차,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명시한 전력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과 송전선로 건설 대신 지중화 또는 서해안 해저 고압 직류송전(HVDC) 등 대안부터 우선 논의할 것, 지역 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수도권 집중, 전력 소비를 분산할 것, 정부조직법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규제기관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싸움은 단순히 송전탑을 막는 것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한전과 정부, 그리고 부당한 사업 추진 세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대책위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전력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전력망 새판짜기 6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력 소비의 분산화 및 지

역별 요금제 도입 △독립 규제기관 설립을 통한 계통 효율성 향상 △공공 전력망 회사와 발전사업자 판매시장 겸업 허용 △전력망 특별법 전부개정 및 통합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인허가 입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수도권 중심 산업정책 재검토 △시민 참여형 전력망 계획 수립을 통한 입지 갈등 사전 예방 등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북 에너지전환 현황과 과제 진단 및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지역사회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고,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21대 대선,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안”을 통해 향후 대선 공약과 제로의 반응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저지 운동을 지속하며, 국가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안군 전통시장 경정 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를 대신해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속가능한 전력망 새판짜기 대선 6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만호 기자

“안전취약계층 보호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해야”

김희수 도의원, 재난대응 시스템 미흡 지적 고령자·장애인 비율 높지만 대피 체계 미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진주6)은 7일 열린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피해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정보 접근이나 대피 능력이 낮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사망자의 93%가 60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재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5.3%, 등록장애인인 7.4%로 상당한 비중

을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북자치도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 계획’에서 “재난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자체 진단을 내려놓고도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자치법규 정비”라고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와 강원자치도는 안전 관련 조례에 ‘재난약자의 특성에 따른 대피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는 반면, 전북자치도가 시행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는 대피계획이나 맞춤형 대응방안 등 핵심적인 규정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만호 기자

염영선 도의원 “사법부 주도 제2 내란… 대법원장 탄핵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7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사법부 주도의 제2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재판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을 단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졸속 처리한 대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적 독립을 모두 훼손한 정치개입”이라며, “이러한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특정 대선후보의 파산거품을 박탈하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법 권력을 앞세워 정치에 개입하는 오만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법공화국을 자처하는 퇴행적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날 염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전북도민의 대표로서, 탑관오리의 불에 맞았던 ‘제곡구민’의 기치 아래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도의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염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는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사법부의 내란 모의에 대해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염 의원은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이미 개입된 사법부의 행위는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사법부에 대해 국민적 감시와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김동구 도의원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실질적 대책 강화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7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5분발언을 통해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던 중,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한 학생이 빨간불임에도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현장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지도하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9월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7건에 달하며, 무인단속 적발 건수 또한 전국 상위 10위권에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등·하굣길 안전지도는 등교시간에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정문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학원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이 차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관리 미흡이 아닌 행정의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학교 주변 교통환경 전반에 대한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등·하교 시간 전체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안전지도 인력 확충 △안전 승차차 존 설치 등 교통안전 인프라 조성사업 확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자체·경찰·교육청의 협업 단속과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